



유신체제기 영화와 방송의 정책적 양상에 관한 연구

유신체제의 법제적 장치에 따른 영화와 방송의 법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오진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okfamily@swu.ac.kr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유신체제가 구축되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과 영구집권을 위해 도입한 정치시스템이자 사회시스템이었다. 유신체제는 당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화와 방송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당시 영화와 방송 정책은 유신체제 안에서 취해지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양상을 보였다. 첫째, 유신헌법이 도입된 이후 제4차 영화법 개정과 제2차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정치 분야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지닌 조직체인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가 설립되었다. 셋째, 긴급조치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영화시책과 방송지침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영화산업과 방송산업의 구조가 독과점 형태로 고착되었고, 영화와 방송의 내용이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변형되었다.

KEYWORDS 유신체제 • 박정희 정권 • 영화와 방송 • 통일주체국민회의 • 영화진흥공사 • 한국방송공사 • 영화시책 • 방송지침 • 긴급조치 • 독과점 형태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들어가며¹⁾

1970년대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도 ‘유신(維新)’이라는 말은 가장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확고히 하며 독특한 체제로서 구축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힘에 의한 직접통제”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에까지도 지대한 파급효과”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6, 99쪽).

그 영향은 대중문화 분야로도 파급되었다. 특히 1970년대는 전성기를 넘긴 영화와 정착기에 접어든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영상문화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던 시기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 분야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관료주의체제, 권위주의체제라는 유신체제의 기본 성격과 연동되어 일차적으로 정책 부문에서 표출되었다.

지금까지 영화학 및 방송학에서 1970년대 한국영화사 및 한국방송사를 다룰 때 유신체제 하의 영화정책, 유신체제 하의 방송정책의 경향과 특징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²⁾ 하지만, 영화정책과 방송정책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이들 정책을 구조적으로 견인하는 유신체제의 법제적 장치와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1970년대가 한국현대사에서 특수한 시기였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문화적 특질이 이후에도 상당기간 존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구는 특정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1) 본 논문 인용문의 표기는 1차 자료인 경우 모든 인용에 있어, 2차 자료인 경우 직접 인용에 한해 인용 대상 자료의 맞춤법 및 표기 방식을 따랐음.

2) 2001년 출간된 『우리 영화 100년』과 『우리 방송 100년』의 경우, 두 책 모두 1970년대를 개괄함에 있어 각각 ‘1. 침체의 수렁’ 및 ‘1. 유신 체제와 방송’ 란을 통해 유신정권의 영화정책, 방송정책을 당대 영화 및 방송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종원·정중현, 2001 / 최창봉·강현두, 2001).

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10.17비상계엄’으로 유신체제가 시작된 1972년부터 ‘10.26사태’로 그것이 종식된 1979년까지를 ‘유신체제기’로 명명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의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화와 방송에 대해 정책적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위해 역사학, 영화학, 방송학 관련 문헌 및 법률 원문, 신문 기사 등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고 연구 주제를 선명히 하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사항에 따른다. 첫째, 영화정책과 방송정책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아우르면서도 유신체제와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1970년대 전체를 다루면서도 유신체제가 성립된 1972년부터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1975년까지 시기에 보다 집중한다. 셋째, 방송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괄하면서도, 영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영상문화 부문의 차원에서 텔레비전 관련 정책에 보다 주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특정 정치분야와 대중 언론, 예술 분야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치며 어떻게 관련을 맺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유신체제로 대변되는 1970년대 한국사회의 특징적 단면을 영화 및 방송 부문에서 발견함은 물론 그것이 한국의 영화사, 방송사, 나아가 대중문화 역사에 있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유신헌법의 성립과 영화법, 방송법의 개정

유신체제의 신평탄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0월 17일의 일이었다. 이날 7시 박정희는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라는 핵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계엄사공시사항, 1972.10.18, 『동아일보』, 1면).

이후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게 되는데,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바로 헌법의 개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비상국무회의는 헌법개정을 위한 예비 장치로서 10월 23일 ‘국민투표에 관한 특별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고, 10월 26일에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 다음날인 10월 27일 공고하였다.

11월 21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1.9%, 찬성 91.5%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으며,³⁾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였다. 이로써 제4공화국 개정헌법이 ‘유신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유신적 개혁의 기초”로서 유신체제의 법률적 기반으로 자리하였다(유신적 개혁의 기초, 1972.10.27, 『동아일보』, 1면).

총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구성된⁴⁾ 유신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숭고한 독립정신”,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 “자유주의적 기본질

3) 정확한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통령에 유신헌법확정 통보, 1972.11.24, 『경향신문』, 1면). 총 유권자 수: 1567,6395명, 총 투표자 수: 1441,0714명, 찬성자 수: 1318,6559명, 반대자 수: 110,6143명, 무효 수: 11,8012명.

4) 유신헌법의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4장 대통령, 제5장 정부, 제6장 국회, 제7장 법원, 제8장 헌법위원회, 제9장 선거관리, 제10장 지방자치, 제11장 경제, 제12장 헌법개정.

서”를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듯 유신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장의 각 조항들을 통해 암시되어 있다. 제10조 1항의 경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강조·인용자)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법률에 의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⁵⁾

유신헌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것이 담고 있는 정치제도 관련 내용이 대부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적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선으로 선출되는(제39조) 대통령의 임기는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제47조) 예전의 중임제한도 철폐되어, 특정 인물의 장기집권 또는 영구집권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제51조), 공무원임명권(제55조) 이외에도 긴급조치 발동권(제53조) 및 계엄 선포권(제54조)을 가졌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국회의원의 1/3을 일괄적으로 추천할 권리도 지녔다. 이에 반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의 권능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⁶⁾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제59조)이 있는 반면 국회에는 대통령탄핵권이 없어,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저지할만한 안

5) 이러한 ‘법률에 의한’ 자유권 제한의 가능성은 거주 및 이전(제12조), 직업선택(제13조), 주거(제14조), 통신(제15조) 등 기본적인 영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용인되고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6, 117쪽). “입법부는 국정감사권을 박탈당하고 연간회기가 150일로 제한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완전히 거세되었다. …(중략)…사법부의 경우에도 법관임명권은 대통령에, 대법원의 위헌판결권은 헌법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독립성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전장치조차 마련되지 못하였다.

유신헌법은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유신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당선된 제8대 대통령 박정희의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었다.⁷⁾ 이처럼 당시 법률적 장치는 삼권을 장악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유신정부가 그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는 오직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제1장 1조 2항)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국민이 국가(기관)의 통제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과정과 맞물리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상과 감정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방향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대중문화, 대중매체에 대한 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⁸⁾ 그 중에서도 영화 및 방송 분야에서 법률 상의 정비 작업이 재빠르게 진행되었다.⁹⁾ 특기할 점은 영화법과 방송법이 1973년 2월 16일 같은 날 각각 법률 제2536호와 제2535호로 동시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당시 한국에서 대중문화, 대중매체 중에서도 특히 영화와 방송의 비중이 컸으며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다.

영화법과 방송법은 모두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지만, 그 이전까지 제정 및 개정 시기가 일치한 적은 없었다. 영화법의 경우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호로 제정되어 1963년 3월 12일 법률 제1305호 1차(일부)개정,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30호 2차(전부)개정, 1970년 8월 4일 법률 제2117호 3차(일부)개정을 거쳐 제4차로(전부)개

7)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 등 515명의 추천에 의해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가 2,359표 가운데 2,357표의 찬성표를 얻어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8) 유신정권의 대중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계엄사령부가 ‘계엄사포고 제1호’를 통해 언론, 출판, 보도, 방송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를 명시함으로써 유신헌법 시점에서부터 실행되었다(계엄사공시사항, (1972. 10. 18), 『동아일보』, 1면).

9) 당시 독립된 법으로서 신문법이나 언론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언법의 경우 1975년 12월 31일에서야 개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제3공화국 체제가 수립된 직후인 1963년 3월 12일 공언법(1961년 12월 30일 제정)과 영화법이 동시에 1차로 개정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된 것이었고, 방송법의 경우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5호로 제정되어 1964년 8월 5일 법률 제1652호 (일부)개정 다음에 제2차로 (일부) 개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영화법은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3공화국 개정헌법보다도 이른 시기에 제정되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데 반해 방송법은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취임 전날 제정되어 단 한 차례만 개정되었다.

이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방송 분야를 주도하던 대중문화, 대중매체가 텔레비전이 아닌 라디오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로서는 정책 입안 주체의 입장에서 시청각 미디어인 영화와 청각 미디어인 라디오에 대한 관리를 굳이 비슷한 템포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텔레비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던 1970년대 전반기의 시점에서 영화와 방송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¹⁰⁾ 이는 1973년 영화법과 방송법의 개정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 점은, 1973년 개정 영화법과 개정 방송법의 성격이 공통적으로 구조상 양자의 공통분모를 이루는 유신헌법의 그것과 닮아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4차 개정 영화법은 총 6장 35조 및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 제3장 영화검열, 제4장 영화진흥공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영화진흥시책의 주관자 및 책임자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제3조). 이는 개정 영화법으로 인해 정부의 간섭은 심해지는 반면 영화인의 자율성은 협소해질 것임을 표시하는데, 실제로 제2장은 영화업의 허가(제4조), 허가 취소(제5조), 영화의 제작 및 수입 편수의 조절(제6조), 국산영화의 제작 신고(제7조), 제작 중지 명령(제8조), 합작영화의 제작(제9조), 제작업과 수입업의 (재)일원화

10)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텔레비전의 광고비는 라디오의 그것을 상향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당시 최대 광고매체였던 신문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방송문화진흥회(편), 1991, 454쪽).

및 영화의 수출입 추천(제10조) 등 영화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에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 처분, 결정, 인정, 추천 등이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제3장의 검열 관련 조항으로도 이어진다.¹¹⁾ 이러한 영화 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기존의 제·개정 영화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제강점 말기인 1940년 1월 4일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로 공포된 ‘조선영화령’에서의 경우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제2차 개정 방송법은 총 5장 2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윤리위원회, 제3장 방송국의 준수사항,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역시 방송 사업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방송법의 경우 사업보다는 업무에 보다 큰 비중이 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방송 환경 상 방송국 개·폐업이 용이한 일이 아닐 뿐더러, 방송 콘텐츠의 일회적 성격 상 전파를 통해 한 번 송신된 것을 수정 또는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는 듯 보인다.¹²⁾ 개정 방송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제1차 개정 방송법에서 삭제되었던 방송윤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복원되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영화에서의 시나리오 및 필름에 대한 이중검열처럼 방송에서도 방송윤리위원회에 의한 윤리규정 심의(제4조, 제5조)와 방송국 심의실 내에서의 자체 사전 심의(제10조)가 공존하게 되었다.¹³⁾ 그렇다고 정부 기관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도 아니었다. 윤리규정 이행에 대한 명령권, 방송국 재허가 유보에 대

11) 이외에도 문화공보부장관은 외국영화 상영제한(제26조), 영화상영의 제한(제28조), 공연장 영업정지 요구(제30조) 등의 권한을 가졌다.

12) 방송국은 개국·휴업·폐업에 대해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지만(제18조), 한편으로는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방송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제19조) 명령에 따라 보충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에 대한 사항 관련 조사에 응해야 한다(제20조). 물론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방송법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13) 이에 대해 이윤진은 “임의단체에 불과했던 방송윤리위원회가 방송법 개정과 함께 법정 자율단체로 일정한 강제성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방송윤리규정의 개정과 심의준칙 발표 등 방송 내용의 규제에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다(이윤진, 2004, 255쪽).

한 요구권, 심의 결과를 보고받을 권리 등 보다 상위의 관리 권한은 여전히 문화공보부장관에 귀속되어 있었으며,¹⁴⁾ 광고방송의 경우 시간과 회수가 대통령령(제15조 2항)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전까지의 제·개정 영화법과 방송법에 비해 제4차 개정 영화법과 제2차 개정 방송법에서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물론 1962년 영화법 제정 이후 박정희 정권은 지속적으로 관 주도의 기업화 정책을 추진해오던 터였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영화의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였다. 이러한 영화기업화 정책의 기초는 제4차 개정 영화법으로도 일부 계승되기는 하지만, 1970년대 영화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정치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이 개정 방송법에서는 방송윤리규정의 내용을 다룬 제5조 2항을 통해 드러난다. 즉, 제2차 개정 방송법에는 제정 방송법에 없었던 '2.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 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당시 유신정권의 대국민 통치 방식 및 슬로건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띤다. 영화법과 방송법의 이러한 성격은, 이것들이 당시 유신체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던 유신헌법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태생적이라 할 수 있다.

14)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 3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항: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요구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항: 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그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출범과 영화진흥공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1970년대 한국 영화사(映畵史)와 방송사(放送史)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영화진흥공사(영진공)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설립 관련 내용이다. 가령,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에서는 “개정 영화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국산영화 진흥기구로서 영화진흥공사의 설립이 명문화된 것”을 들고 있으며(김미현 외, 2006, 224쪽), 『한국방송총람』에서는 1972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를 공영방송 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영기’로 구분하고 있다(방송문화진흥회(편), 1991, 424쪽).

영화법과 방송법의 개정이 영화 및 방송 통제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은 영화 및 방송의 통제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직체 구성이라는 형태로 고안된 것이라 할만하다. 물론,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은 일차적으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영화진흥공사의 경우 제4차 개정 영화법 안의 제4장에서 총 12조항에 걸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제2차 방송법 개정 이전인 1972년 12월 30일에 법률 2418호로서 별도로 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에 모든 규정이 담겨 있다. 당시 영화 및 방송 정책에서 차지하는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가 유신체제 수립 이후 갑작스레 탄생한 것은 아니었고, 기존의 ‘영화진흥조합’과 ‘중앙방송국’이 공사(公社) 체제로서 전환된 것이었다. 영화진흥조합은 제3차 개정 영화법을 통해 영화 관련 각종 단체들이 “국산영화의 진흥과 상호의 공동이익 및 영화산업육성금융 등을 위하여”(제3차 개정 영화법 제19조 2항) 설립한 조합적 성격의 사단법인 단체였다. 또한 중앙방송국은 “1968년 주무관청인 공보부가 문교부의 문화행정 일부를 이관받아 「문화공보부」로

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1968년 7월 25일 기존의 서울중앙방송국(1947년 출범), 서울국제방송국(1961년 개국), 서울텔레비전방송국(1961년 개국)이 하나로 통합되어 설립된 국영 방송사였다(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편), 1997, 341쪽).

이들 공사의 업무와 역할은 기본적으로 영화진흥조합 및 중앙방송국의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게 기존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가감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영화진흥공사의 경우 영화제작자에 대한 보조(제3차 개정 영화법 제23조) 및 영화편수의 조절(제24조) 관련 사항이 빠져 있는 대신 사업 내용에 있어 “영화의 (직접적인) 제작”(괄호-인용자, 제4차 개정 영화법 제22조 4항)이나 “영화제작시설의 설치 및 운용”(제22조 6항) 등이 첨가되어 있다.¹⁵⁾ 이러한 변화는 영화정책 실행 과정에 있어 영화인과의 논의와 협의의 통로를 협소화하고 영화 환경 및 제작 경향을 조절하려 하였던 유신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영화정책 상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영화계의 불황을 타계하는 모델로서 국가가 직접 나서 영화제작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영화를 통해 “물리적 탄압뿐만 아니라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민동원체제를 세워 통제를 강화하”고자(역사학연구소, 1999, 333쪽) 하였던 것이다.¹⁶⁾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은 결국 유신체제의 산물임에 분명하고, 당시 유신체제라는 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이를 추종하던 제도적 조직체는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통대)였다고 볼 수 있다. 유신

15) 제4차 개정 영화법이 공시한 영화진흥공사의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국산영화의 수출 및 외국영화의 수입의 알선 3. 국산영화의 수출시장 개척 4. 영화의 제작 및 영화제작을 위한 용자 5. 영화의 진흥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6. 영화제작시설의 설치 및 운용 7. 영화인의 복리증진 8. 기타 영화진흥에 관한 사업

16) 영화진흥공사에서 제작된 영화들 모두가 국책선전영화였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헌법 제3장 제35조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전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명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입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강조-인용자). 이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체로서 결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러나 사실 대의정치의 핵심인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최고 권력자에 대한 직접 선거권을 침탈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000~5,000명으로 구성(유신헌법 제36조 1, 2항)되었는데, 문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며(제36조 3항) 여기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는(제36조 3항) 데 있었다. 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의 자격이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제37조 1항)로 매우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당시 유신체제의 경직성 및 폭력성과 연결되어, 구조적으로 독재체제의 구축을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일괄 추천으로 후보자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의 1/3¹⁷⁾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제40조 1, 2항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처음부터 1인 독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체로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신체제는 동시기 한국의 총체적 위기 상황 및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대처의 결과물이었다.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선전(득표율 43.6%)과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신민당의 약진(개헌 저지선인 69석보다 20석 많은 89석 확보)으로 생성된 정권교체에 대한 부담감, 1970년대 초반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하에서 분출된 노동자, 빈민층, 학생층, 지식인의 노동운동, 주민운동, 반독재운동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등 국내적인

17) 이렇게 선출된 이들은 ‘유정화’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여, “국회, 심지어 공화당마저 정치과정에서 소외시키고 무력화시키면서 박정희의 친정체제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내의 친위부대”로 군림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6, 121쪽).

상황과 1970년 8월 27일 주한미군 1개 사단 약 2만 명의 철수로 상징되는 데탕트 시대, 미국의 동북아 세계 전략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및 통일전략의 변화 등 국제적인 상황이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¹⁸⁾

따라서 “국가→국민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일원화된 매우 조직된 국민동원체제였고, 경제발전으로 위시되는 협소한 기술합리성이 지배하는 폐쇄적 체제였”던(조항제, 2004, 264쪽) 유신체제의 산물인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에도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존재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치적인 요인이라 하면 유신체제의 성립이라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요인이라 하면 영화 및 방송의 산업 환경이라 할 수 있다.¹⁹⁾ 전자의 경우는, 살펴본 바대로 유신체제 내에서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가 공통적으로 정치 분야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처럼 영화 및 방송 정책 부문의 제도적 조직체로서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데 있다. 후자의 경우가 문제적인데, 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1970년대 영화와 방송,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 간의 위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전반기 영화 및 텔레비전 관련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로 표면화된다.

〈표 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전반기 거의 모든 영화 관련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낸다. 제작사 수, 극장 수는 물론이고, 특히 제작 편수의 경우 1975년의 수치는 1970년의 그것의 약 39.7%에 불과하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표성을 띠는 관객 수 역시 매년 평균 12.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텔레비전 보급 대수는 연평균 증가율 4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후반에도 지속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영화와 텔레비전의 산업적 지표의 증감 현상이

18) 이에 따라,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출범시키면서 그 명분으로 첫째 “안보와 관련한 위기의식”, 둘째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셋째 “질서와 능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6, 105쪽).

19) 조항제 역시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체제 준수’와 ‘상업주의’로 보고 있다(조항제, 2003, 243쪽).

표 1. 1970년대 전반기 영화 및 텔레비전 관련 주요 지표¹⁾

연도	영화 지표				텔레비전 지표	전년대비 증감률(%)	
	제작사 수	제작 편수	극장 수	관객 수	보급 대수	관객 수	보급 대수
1970	23	209	690	166,349,541	379,564	-3.9	+69.6
1971	23	202	717	146,303,355	616,392	-12.1	+62.4
1972	20	122	694	118,273,789	905,365	-18.8	+46.8
1973	12	125	662	114,625,241	1,282,122	-3.4	+41.6
1974	14	141	630	98,375,813	1,618,617	-15.0	+31.2
1975	15	83	602	75,597,977	2,014,927	-22.4	+24.5

상호연계적, 인과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영일은 1970년대 한국영화가 “깊은 쇠퇴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1970년대의 우리 사회의 근대화를 배경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한 TV의 보급”을 들고 있다.²⁰⁾ 1970년대 영화 산업의 쇠퇴와 텔레비전 산업의 약진을 대중 영상문화, 영상매체 간의 위계 변동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1970년대 들어 영화와 텔레비전 간의 대중적 파급력이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유신정권의 대중문화, 대중매체 활용정책에 있어서도 영화와 텔레비전 간의 위계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과정에도 대입되었다.

제4차 개정 영화법 14조(설립)는 영화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을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하며, 한국방송공사법 제1조(목적)는 그것을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과

20) 그 다음의 이유로는 “국민들의 오락성향과 형태가 다양해진 점”과 “영화자체의 질의 문제”를 들고 있다(이영일, 1988, 451-452쪽).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이라고 명시한다. 제4차 개정 영화법 제4장은 제14조(설립), 제15조(법인격), 제17조(임원),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 제21조(이사회), 제22조(사업), 제23조(국산영화 진흥기금), 제24조(사업계획등), 제25조(민법의 준용)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법은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과 출자), 제5조(정관), 제6조(등기), 제7조(감독),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5조(임원의 신분과 책임), 제16조(이사회), 제17조(업무),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예산 및 회계), 제20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 제21조(시청료 징수), 제22조(사채), 제23조(차입금), 제24조(협의), 제25조(보조금), 제26조(손익금의 처리), 제27조(검사등), 제28조(벌칙), 제29조(시행령),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기한 점은, <표2>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영화진흥공사 설립 관련 조항과 한국방송공사 설립 관련 조항에 있어서도 일치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제4차 개정 영화법 제4장의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진흥공사 조직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한국방송공사법의 여러 조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²¹⁾ 이는 일차적으로 정책 당국이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영화와 텔레비전을 유사한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테두리에 넣고 동일한 관리방식을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왜 그 방향성이 텔레비전에서 영화로 인가 하는 점이다. 제4차 개정 영화법과 제2차 개정 방송법이 같은 날 개정되었고 유신정권이 이에 앞서 굳이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은, 여기에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더욱이 한국

21) 이러한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의 밀접한 관계는 1977년 1월 영화진흥공사가 남산에 있던 한국방송공사의 사옥을 인수하여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된다(영화진흥공사 이사간다, 1990.2.3, 『매일경제』, 13면).

표 2. 영화진흥공사 설립 관련 조항과 한국방송공사 설립 관련 조항 중 공통 부분

제4차 영화법 제4장 (1973.2.16)	한국방송공사법 (1972.12.30)
제1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이사 4인,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을 둔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 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5.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의 제작·수입·수출 또는 공연에 관한 영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5.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
제21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방송공사법은 제4공화국이 출범한 지 불과 며칠 후에 마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표 1>의 텔레비전 관련 주요 지표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신체제 수립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성을 지니고 있던 영상문화, 영상매체는 바로 텔레비전이었다. 따라서 유신정권의 입장에

서는 그것을 통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문제는 당시 국영방송국이던 KBS보다는 MBC, TBS 등 민영방송국이 상업성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KBS를 통해 방송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 활용도는 높이려는 목적 하에 한국방송공사가 설립되었다. 다만, 통제 부분은 여타의 법제적 조치로도 제어가 되는 사항이었기에, 무게중심은 상대적으로 활용 부분에 있었다. 1973년 한국방송공사 공채 1기로 입사한 강동순도 “독재의 철권정치 속에서 KBS는 국가발전을 위해 동원되고 활용되어야 할 도구로 당연시 되었다.”라고 회고한다(강동순, 2006, 24쪽).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구상하던 시기부터 대중적 영향력이 지대한 텔레비전을 이용하려 하였고, 구체적인 논의의 결과가 KBS의 공사화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전통적인 대중 영상문화, 영상매체였던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당시 영화는 텔레비전처럼 직접적인 보도, 계몽,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텔레비전과는 차별되는 ‘핫 미디어’로서 관객에게 스펙터클을 통한 자극과 내러티브적 완결성을 통한 몰입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존재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매체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영화진흥공사 발족과 더불어 정부가 내린 지시는 대형 국책영화”를 제작하라는 것이었다(호현찬, 2003, 207쪽). “표면적으로는 한국영화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작영화 제작이 취지였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신체제에 적합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다 짙게 깔린 요구였다(정중하, 2007, 164-165쪽).

1973년 4월 3일 출범한 영화진흥공사의 국책영화는 반공을 다룬 〈증언〉(임권택 감독, 1973), 〈울지 않으리〉(임권택 감독, 1974), 〈들국화는 피었는데〉(이만희 감독, 1974), 〈잔류첩자〉(김시현 감독, 1975), 〈태백산맥〉(권영순 감독, 1975)과 새마을운동을 다룬 〈아내들의 행진〉(임권택 감독, 1974) 등 여러 편이 제작되었으나, 대부분은 관객에게 외면당하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지도, 국산영화의 모범이 되지도 못하

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²²⁾ 이러한 모습은 텔레비전 쪽에서도 비슷하게 재연되었는데, 1973년 3월 3일 새롭게 출범한 한국방송공사는 규모와 조직이 확대화, 체계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공영성과 공정성으로 대표되는 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에 있어 표본을 제시하지도, 그렇다고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 상업 방송을 견인하지도 못한 채 공영 방송국의 자리를 걸돌고 말았다.

4. 긴급조치의 발동과 영화시책, 방송지침의 고시

대다수의 독재정권이 그러하듯이, 유신정권 역시 독재체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1969년 9월 14일 대통령 3선 개헌을 변칙 통과시킨 바 있었다.²³⁾ 이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에게 신승을 거둔 박정희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화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해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의 선포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특별담화문에서 박정희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동과 북한의 동향을 이유로 들며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논리로 국민에게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아가

22) 한편, 한국방송공사로의 출범 이후 KBS는 1974년 4월 15일부터 1975년 10월 5일까지 국책성 홍보 드라마 〈꽃피는 팔도강산〉을 방영하였는데, 이는 〈팔도강산〉(배석인 감독, 1967), 〈속 팔도강산〉(양종해 감독, 1968), 〈내일의 팔도강산〉(강대철 감독, 1971), 〈아름다운 팔도강산〉(1971, 강혁), 〈우리의 팔도강산〉(장일호 감독, 1972) 등 유신선포 이전 시기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정책을 선전한 일련의 극영화 콘텐츠가 텔레비전 드라마 형식으로 변환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기도 하였다.

23) 이때 통과된 개헌안은 같은 해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가 참가한 가운데 65.1% 찬성표를 얻어 확정되었다.

겠다는 굳은 결의”를 강요한다.²⁴⁾ 이에 따라 취해진 ‘비상사태 6개항 조치’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 상 취약점이 될 일절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 상 채무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강조·인용자)

내용의 핵심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회와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데 있다. 여기서도 사회와 국민 사이에 위치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언론이다.

1971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은 권력에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던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3월 24일 서울대 법대생들의 ‘언론 화형식’과 다음 날 문리대생들의 ‘언론인에게 보내는 경고장’을 시작으로 언론 자유를 위한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교련 철폐, 학원 민주화 등의 요구와 맞물리며 민주수호운동으로 발전되었다. 그 영향으로 신문의 날 15돌 하루 전인 4월 6일 기념식 상에서는 언론인의 단결과 언론 자유화를 위한 도전이 결의되었고(신문의 날 15돌 “굳게 뭉쳐 자유언론수호”, 1971. 4. 6, 『경향신문』, 1면), 4월 8일에는 각계 인사들이 양대 선거의 공명을 다짐하는 ‘민주수호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

24) 홍미로운 점은, 여기서 박정희가 북한의 체제를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선적인 독재체제”라며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박대통령특별담화문, 1971. 12. 6, 『경향신문』, 1면).

다(종교·언론·법조계 등 인사 「민주수호선언」 채택, 1971.4.9, 『동아일보』, 1면).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같은 해 10월 17일 위수령 발동²⁵⁾과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을 거치며 소강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출범 이후 언론인을 정·관계에 영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회유책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1973년 4월 23일에는 11개 정부 부처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여 그 담당자를 언론계에서 충당하였고, 9대 국회에서는 유정희 의원 8명을 비롯하여 19명의 전직 언론인을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으며, 11명의 언론인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만들었다(동아일보사 노동조합, 1989, 34-35쪽).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²⁶⁾하는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이 되어야 할 언론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횡포는 그 가능성을 더욱 키워 갔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은 이미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관련 조항을 통해 공표되어 있었다.

제53조

-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25) 이때 위수령은 당시 대학 군사교육 철폐, 중앙정보부 해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서울 일원에 내려졌다.

26) 언론기본법 제1조(목적).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 대중매체,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와 방송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 국가개입 현상도 심화되었다. 이는 특히 영화 및 방송 내용에 대한 검열 실시와 준칙 제시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우선 영화에 대해서는 제4차 개정 영화법 제3장의 검열 관련 조항들이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제13조에 명시된 검열기준의 첫 번째가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 여부라는 점은 영화검열의 목적 및 성격을 대변한다.²⁷⁾ 특히 “검열을 받은 극영화를 텔레비전방송에 방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문화공보부장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12조 4항은 당시 영화 규제와 방송 규제가 동일선상에서 놓인 상태에서 재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제2차 개정 방송법 제6조는 방송국으로 하여금 방송윤리위원회의 요구와 문화공보부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²⁸⁾ 이를 근거로 1975년 방송윤리심의준칙을 발표한 이래 방송윤리

27) 1970년 2월 20일부터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에서 시나리오 검열을 시작하였고, 1976년부터는 공연법 개정과 함께 ‘공연윤리위원회’가 발족되어 업무를 이어갔다. 박지연에 따르면, “예륜이 형식적인 자율기구였다면, 공윤은 행정기구로 검열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영화의 필름 앞부분에 검열필 여부를 표시하는 자막을 삽입하도록 하였다(박지연, 2004, 167쪽). 한편, 박정희 정권은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 2337호)’을 공포하여 문예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였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1973년 3월 30일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흥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출판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친 창작, 연구, 보급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탄생”하였다. 이후 유신정권은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1974~1978)을 통해 경제개발식의 문화예술진흥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박지연, 2005, 189-267쪽).

28) 관련 법률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 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위원회는 매년 여러 차례 권고사항과 심의기준을 하달하였다.

이후 유신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실제로 긴급조치를 작동시켰다. 1974년 1월 8일 헌법에 대한 일체의 언급, 논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장 없이 구속하고 비상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1호, 제2호가 공포된 후 1975년 5월 13일 제9호가 공포될 때까지 약 1년 4개월여 사이에 무려 9번의 긴급조치가 발동되었다. 특히 마지막에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여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만큼 긴급조치 제9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 구석구석에서 유신체제를 지탱하였던 것인데, 이는 1975년 4월 8일 고려대의 휴교, 집회 및 시위 금지, 병력투입 조치를 취하며 나온 ‘긴급조치 7호’가 ‘긴급조치 8호’로 해제됨과 동시에 발동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성격은 더욱 뚜렷해진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총 14조로 이루어진 긴급조치 9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유독 표현의 자유 관련 부분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내에 그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요구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그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폐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었으니, 당시 국민들이 체감하던 강제력에 있어서는 헌법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긴급조치 발동에 연동하여 영화시책과 방송지침이 더욱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영화시책과 방송지침은 영화법과 방송법의 개정을 계기로 1973년부터 매년 이루어져 왔었지만, 그것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영화 및 방송 정책을 선도하고 조종하기 시작한 때는 긴급조치와 맞물리면서부터였다.

제4차 개정 영화법 제3조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육성,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 영화인의 복리증진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매년 초에 구체적인 영화시책이 고시되었다. 문화공보부는 유신이념 및 민족문화의 구현과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이라는 기조 하에 영화시책을 통해 우수 영화 제작 및 수입, 영화수급계획, 영화검열, 영화의 수출, 영화광고물의

정화, 외국인 출연, 시나리오 심의, 스크린쿼터제, 영화진흥사업, 영화계 부조리 삼제(芟除) 등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²⁹⁾ 특이한 점은 긴급조치 9호 발동이 그 양상의 전환점으로 작용되었다는 사실이다. 1975년까지 주로 10편이라는 제작편수의 상한선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1976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8편이라는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고 1975년까지 영화진흥공사가 주도해 오던 국책영화 제작 사업을 1976년부터는 민간 영화사가 전담하게 되었으며, 우수영화 제작이 의무화되었다.³⁰⁾ 이와 더불어 외국영화 수입권 보상에 있어 1975년까지 존속되어 오던 극영화 제작 상영실적에 대한 보상, 영화제 수상 국산 극영화에 대한 보상, 수출 실적에 대한 보상 등의 항목이 기존의 우수영화 제작 실적에 대한 보상에다가 국책영화 제작에 대한 보상이 덧붙여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³¹⁾

이러한 양상은 방송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2차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교양방송의 비율의 기존의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리고 광고의 비율을 10% 이하로 규제한 바 있던(교양방송 30% 넘도록, 1973.3.10, 『동아일보』, 7면) 유신정권은 방송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기준과 결정사항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방송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법외적 조치’로서 문화공보부 장관의 회견이나 담화 등의 형식으로 방송지침을 하달하였는데, 그 핵심은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있었다. 방송지침은 긴급조치 9호 발동을 계기로 특히 텔레비전 방송 영역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1975년 6월 30일

29) ‘1973년도 영화시책’, 영화진흥공사(1977, 225-228쪽) 참조.

30) 이 가운데 우수영화 제작에 관한 사항은, “각영화제작사는 동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검열합격된 국산영화 가운데 2편이상의 우수영화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하며”라는 ‘1975년 영화시책 일부 변경’에 의해 1975년 7월 23일부터 적용되었다. ‘1975년도 영화시책’, 영화진흥공사(1977, 235쪽) 참조.

31) 1976년의 경우, 총 40편의 외국영화 수입권은 우수영화 제작 실적 보상에 28편, 국책영화 제작 보상에 10편, 우수외국영화 복사판에 2편이 배정되었다. ‘1976년 영화시책’, 영화진흥공사(1977, 236-237쪽) 참조.

문화공보부는 긴급조치 9호 발동에 발맞추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세부 규정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방송내용의 사전심의 강화, 방송원고 녹음은 1년간, 녹화는 1개월간 보관토록 한 것이었다.” 1976년 1월 12일에는 문화공보부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행정지도가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저녁 8시대 20분짜리 사회교양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송지침의 정점을 찍은 것은 1976년 4월 12일 발표된, 이른바 ‘시간대 편성 지침’으로도 불리는 ‘TV의 국민교육 매체화방침’이었다. 이로 인해 “중전의 10시 뉴스를 9시로 앞당겨 편성하고 오락은 뉴스시간 이후로 하며, 어린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7~8시 띠는 사회교양 프로그램을 편성, 일일극은 2편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편성표가 고정되었다(이윤진, 2004, 257-258쪽).³²⁾

영화와 방송의 제작,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문화공보부를 통해 이루어진 유신정권의 영화시책과 방송지침의 영향으로 당시 영화 제작과 방송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특히 장편 극영화와 텔레비전 연속극의 경향이 변화되었다. 영화 분야에서는 각 영화사들에 의해 외국영화 수입쿼터를 목적으로 우수영화, 국책영화, 대작영화가 앞 다투어 제작, 기획되었으며, 텔레비전 분야에서는 평일 프라임 타임을 중심으로 교양 프로그램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일일 연속극³³⁾이 주말 연속극³⁴⁾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상당수의 영화는 제작은 상영되지 못한 상태로 사장되거나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

32) 당시 신문 지상에는 관련 내용이 거의 게재되지 못하였고, “중래의 TV편성 제작 방향을 백지화”함으로써 기본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TV프로 12일부터 일제 개편, 1976.4.5, 『경향신문』, 8면)는 내용 정도의 기사만이 드물게 실릴 뿐이었다.

33) 1970년대 한국에서는 1970년 TBC의 〈아씨〉를 시작으로 1972년 KBS의 〈여로〉, 1973년 MBC의 〈새엄마〉를 거치며 1970년대 전반기에 텔레비전 일일 드라마의 전성기가 열렸다.

34) 1976년 TBC는 토요 드라마 〈결혼행진곡〉을 방영하고 가을 개편 때부터 이를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 드라마로 바꾸었는데, 그것이 크게 히트하였다. 이에, MBC도 1977년부터 〈왜 그러지〉, 〈후회합니다〉 등의 주말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멜로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주말 연속극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았고, 이렇게 편성된 프로그램은 당국이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성공하였을지는 모르나 텔레비전에 대한 대중적 친근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전략시킨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왜곡화된 1970년대 한국에서의 영화와 방송은 결국 영화 관객들과 텔레비전 시청자들, 즉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표류하고 말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유신정권의 모순이 분출되는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점점 심화되어 갔다.

5. 나가며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커다란 변화는 바로 유신체제가 구축되고 확립되었다는 데 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위해 고안해낸 정치시스템이었지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시스템으로도 적용되고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의 감정과 사상, 또는 의견과 여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영화와 방송은 유신정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리하고 간섭해야 할 분야였다. 그렇기에, 영화정책과 방송정책은 유신체제 성립 과정에서 다른 어떤 분야 관련 정책보다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입안되고 추진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방송 분야 내에서도, 동시에 영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텔레비전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영화정책과 방송정책은 동일한 영상문화, 영상매체라는 관점에서 상당부분 동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적, 사회적 타당성을 보유하지 못한 유신정권이 체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던 작업은 바로 그것의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는 곧바로 영화 및 방송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유신체제의 법률적 장치로서 제정된 유신헌법의 성립은 제4차 영화법 개정과 제2차 방송법 개정의 계기와 근거가 되었다. 정치 분야에서의 통일

주체국민회의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지닌 조직체인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설립되었으며, 유신체제의 존재감을 국민 개개인 및 사회 곳곳에 각인시킨 긴급조치의 공포 및 발동에 따라 새로운 영화시책과 방송지침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영화정책과 방송정책으로 동시기 영화업과 방송업의 구조가 독과점 형태로 고착화되었고,³⁵⁾ 영화 및 방송의 제작편수, 편성방식 등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되었으며, 영화와 방송의 내용이 국가권력이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 규제와 간섭과 통제와 동원의 과정을 거치며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의 저항이 있기도 하였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소속의 약 180명의 기자들이 신문·잡지·방송에 대한 외부간섭, 기관원의 출입,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자유언론실천 선언’을 발표하였고(동아일보 기자일동 자유언론실천 선언, 1974.10.24, 『동아일보』, 1면), 이러한 움직임은 여타 일간지로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서울신문·시사통신·지방기자도 언론자유수호 선언, 1974.10.26, 『동아일보』, 1면). 이에 대해 유신정권은 광고주들에 대한 협박을 통해 《동아일보》에 자금 압박을 가하였으며, 이에 굴복한 경영진에 의해 《동아일보》에서 3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7차례에 걸쳐 113명의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11일 32명의 기자가 해고당하기도 하였다(강준만, 2002, 219쪽). 그러던 중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유신체제가 ‘합법화’되고 말았는데,³⁶⁾ 이후 각 신문들도 긴급조치 9호에 따르며 권력의 횡포를 용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35) 제4차 개정 영화법과 제2차 개정 방송법에 따라 법률상 허가, 재허가, 허가취소되는 영화사와 방송사가 정해짐으로써, 영화사의 경우 20개 이내의 회사에 의해, 방송사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의해 독과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방송업계의 경우 기존(1963년)의 《중앙일보》+TBC(중앙방송), 《동아일보》+DBS(동아방송)에 이어 1974년 MBC(문화방송)의 《경향신문》 합병을 통해 복합대기업화되기도 하였다.

36) 당시 국민투표의 결과는 투표율 79.8%에 찬성률 73.1%로 집계되었다.

상황에서, 처음부터 유신체제에 순응적이던 영화계와 방송계의 공식적인 활동은 유신정권에 의해 정해진 바대로 고정되어 갔다. 물론 그것을 제시하고 유도한 것도 다름 아닌 영화정책과 방송정책이었다.

이러한 영화 및 방송 정책은 유신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반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으로 그 모양새만을 달리 한 채³⁷⁾ 주로 국가의 이익과 정부의 의도에 따라 취해지다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식이 고양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연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³⁸⁾

인터넷 혁명, 디지털 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대중문화 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21세기 현재에도 관련 정책의 비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문화적 생산자와 소비자, 매체 상의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별이 모호해져 버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과거 영화정책, 방송정책의 발자취를 통해 앞으로의 대중예술, 대중매체 관련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가늠하고 조정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을 들쭉이게 하였던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개정 과정의 사회적 파장은 그것이 결코 과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1970년대 한국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문화로 자리하던 영화 및 방송 정책이 어떠한 체제적 특징을 내재화하며 어떠한 공통적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37) 영화법의 경우, 제5차 영화법 개정은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76호로 이루어졌고 이후 4회에 걸쳐 개정이 더해졌다. 방송법의 경우,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7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동시에 법률 제3347호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38) 이에 따라 영화법은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9호에 의해, 언론기본법은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7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영화 관련 법령은 영화진흥법(제정 1995.12.30 법률 제5129호, 폐지 2006.4.28 법률 제7943호)을 거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2006.4.28 법률 제7943호,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방송 관련 법령은 방송법(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달 매체와 예술 장르의 변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더불어 영화와 방송 간의 정책적 차이의 간격도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³⁹⁾ 본 논문을 계기로 1970년대 영화와 방송을 동시에 다룬 후속 (비교)연구가, 이들 간의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을 도출하거나 여타 인접 시기를 아우르거나 산업, 콘텐츠, 수용자 등으로 주제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9) (한국에서의) 영화와 방송 간의 미학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류형진(2006, 22-61쪽)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 강동순 (2006). 『KBS와 권력』. 서울: 서교출판사.
- 강준만 (2002). 『한국 현대사 산책-1970년대편 2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김미현 외 (2006).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종원·정중현 (2001). 『우리 영화 100년』. 서울: 현암사.
- 동아일보사 노동조합 (1989). 『동아 자유언론실천운동 백서』. 서울: 동아일보사.
- 류형진 (2006). 『영화와 방송의 연계방안 연구』.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 박지연 (2004). 1960, 70년대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한국영상자료원(편), 『한국 영화사 공부 1960~1979』(143-185쪽). 서울: 이채.
- 박지연 (2005).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1984년).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189-267쪽). 파주: 나남.
- 방송문화진흥회(편). (1991). 『한국방송총람』. 서울: 나남.
- 역사학연구소 (1999). 『강좌 한국근현대사』. 서울: 풀빛.
- 영화진흥공사 (1977). 『한국영화자료편람』. 서울: 대양문화사.
- 이영일 (1988). 『한국영화주조사』. 서울: 영화진흥공사.
- 이윤진 (2004). 텔레비전 고속도로: 시각화된 촉각성. 임상원 외(2004), 『매체·역사 근대성』 (241-278쪽). 서울: 나남.
- 정종화 (2007). 『한국영화사』.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 조항제 (2003).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권력』. 서울: 한울.
- 조항제 (2004). 『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 서울: 한울.
- 최창봉·강현두 (2001). 『우리 방송 100년』. 서울: 현암사.
- 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편). (1997). 『한국방송70년사』. 서울: 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6). 『한국현대사』. 서울: 풀빛.
- 호현찬 (2003). 『한국영화 100년』. 서울: 문학사상사.

공연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4호]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방송법 [제정 1963.12.16, 법률 제1535호]

방송법 [(타)일부개정 1964.8.5, 법률 제1652호]
 방송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5호]
 방송법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방송법 [(타)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언론기본법 [제정 1980.12.31, 법률 제3347호]
 영화법 [제정 1962.1.20, 법률 제995호]
 영화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5호]
 영화법 [전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0호]
 영화법 [일부개정 1970.8.4, 법률 제2217호]
 영화법 [전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06.4.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영화진흥법 [제정 1995.12.30 법률 제5129호]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18호]
 한국방송공사법 [일부개정 1975.12.15, 법률 제2789호]

계엄사공시사항. (1972.10.18). 『동아일보』, 1.
 교양방송 30% 넘도록. (1973.3.10). 『동아일보』, 7.
 대통령에 유신헌법확정 통보. (1972.11.24). 『경향신문』, 1.
 동아일보 기자일동 자유언론실천 선언. (1974.10.24). 『동아일보』, 1.
 박대통령특별담화문. (1971.12.6). 『경향신문』, 1.
 서울신문 시사통신·지방기지도 언론자유수호 선언. (1974.10.26). 『동아일보』, 1.
 신문의 날 15돌 “굳게 뭉쳐 자유언론수호”. (1971.4.6). 『경향신문』, 1.
 영화진흥공사 이사간다. (1990.2.3). 『매일경제』, 13.
 유신적 개혁의 기초. (1972.10.27). 『동아일보』, 1.
 종교·언론·법조계등 인사 「민주수호선언」 채택. (1971.4.9). 『동아일보』, 1.
 TV프로 12일부터 일제 개편. (1976.4.5). 『경향신문』, 8.

최초 투고일 • 2011. 01. 09
 논문 수정일 • 2011. 02. 08
 게재 확정일 • 2011. 02. 12